

## 정치평론에서 정책평론으로 '자각된 시민'과 '마중물 정치'에 관한 시론적 논의

유 범 상\*

### I. 한국의 민주주의와 소통의 빈곤

#### 1. 사회권, 공론장, 정책평론이 취약한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첫째 사회권 취약한 민주주의였다. 한국의 정치는 반공주의와 근대화, 즉 성장제일주의에서 그 정당성을 찾아 왔다. '싸우면서 일한다', 또는 '선성장 후분배'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정치세력들의 핵심적인 목표이자 정통성이 없는 정권들의 정당화 이데올로기였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정책은 제한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민들의 사회권을 신장하는 정치세력의 취약성 때문이고 사회복지가 도입될 때조차 어떤 이념적이고 일관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배세력의 정당화를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는 노동운동의 조직화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 중산층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작업장 및 국가적 수준

---

\*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교수

에서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발전의 계기는 1997년 말의 금융위기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도입이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세계은행과 IMF의 요구에 기반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기적이고 임의적인 잔여적 복지수준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좀 더 진전된 복지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이 제도적 설계가 신자유주의 또는 제3의 길의 일을 위한 복지에 기반해 있었다는 점에서 복지의 기반과 시선이 바뀌지는 못했다.

이것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고찰한다면, 우선 민주주의는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경제적 민주주의 두 개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자가 선거와 의회의 절차와 제도를 강조하는 형식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는 내용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첫 번째 단계를 1987년 민주화 이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단계는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시민사회와 노동자조직의 지지 속에서, 사회보장을 달성한 복지국가에서 완성되는 것인데, 현재 한국은 오히려 사회권의 차원에서 최장집 교수의 표현대로 ‘질 나쁜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둘째 공론장이 취약한 민주주의였다. 자유주의의 입론을 세운 밀(J.S. Mill)은 그의 명저 ‘자유론’에서 자유의 기본전제로서 자유로운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의 3대 요소인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 단결의 자유는 비판이 존재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비판은 더 나은 의견과 더 나은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밀은 ‘악마의 옹호자’에 주목하는데, 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인을 추대할 때 그 성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내세운 사람이다. 즉 성인이 막 되려는 자도 비판의 관문에 서야 한다.

비판은 열린 광장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다. 광장 혹은 공론장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욕구와 이익 그리고 개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이것을 통해 사회는 도처에 존재하는 시민들의 아픔, 욕구, 압제, 희망, 대안 등을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광장’ 또는 공론장이 매우 미약하게 존재했다. 군부독재와 분단의 상황 속에서 검열의 정치가 횡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광장은 동원의 공간, 즉 특정 권력의 과시, 홍보, 전시의 공간이 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광장은 시민들의 차이(개성)가 편안히 드러나고, 시민들이 공동성찰을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 세력들의 선전의 공간이 되어 왔다. 즉 한국의 민주주의는 소통의 공론장보다는 상대를 헐뜯고 자신을 홍보하는 사이비 광장을 자신의 터전으로 삼아 왔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셋째 정책평론이 취약한 민주주의였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토론을 매개로 해서 발전해 오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군부독재타도’, 지역주의, 혈연·학연·지연에 대한 비판, 북한에 대한 입장 등의 담론과 실천에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빈곤정책, 젠더문제, 소수자에 대한 억압문제,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대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해 오지 못했다. 이러한 사이에 대부분의 정책은 형식적인 토론에서, 권위주의적 정부나 기술관료들에 의해 입안되고 제도화되어 왔다.

## 2. 사회운동과 소통의 빈곤

사회운동의 위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소통의 빈곤으로부터 기인한다. 그것은 첫째, 개혁가 집단간의 소통의 부재, 둘째, 이념집단과 정책 간의 소통의 부재, 셋째, 개혁가 집단과 일반 시민 간의 소통의 부재이다.

첫째, 이념은 (정치)세계에 대한 체계화된 태도, 전망, 비전을 의미한다. 즉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규정의 태도이자 방식이고 자신이 이해하는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지침이다. 따라서 이념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문제삼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고 이

를 통한 개입이다. 이런 점에서 이념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철학적·정치적·전략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한국의 사회운동가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집단으로서 세계에 대한 해석, 변화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실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왔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개혁가 집단은 그동안 특정 이념에 기반한 그룹이었고 그렇게 인식되어져 왔다. 하지만, 이 이념은 공적인 토론을 통해 활성화되고 풍부화되지 못했고,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지평과 세력관계를 해석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무기가 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지침이 되지 못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을 타정파와의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자신들을 전시하고 홍보하는데, 자신들의 결속을 도모하는데 이용되어 왔다. 즉 이들과 각 정파는 이념을 상대방을 낙인찍고 검열하는 무기로 사용했고 다른 이념과 논쟁·경쟁하지 않고 정책과 소통하지 않았고 더욱이 특정분파와 그 개혁가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기능적으로만 사용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념은 실천의 무기라기보다는 ‘무기의 이념’ 또는 ‘빈곤의 이념’으로 자기를 특징지워 왔다.

둘째, 정책은 특정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 방법을 담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은 특정 세력의 세계에 대한 해석과 실천의 방법이 담겨있는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매뉴얼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진공의 상태를 상정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세, 그 정세속의 세력관계, 이용가능한 자원, 그리고 내적 논리의 일관성 등을 전제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현실과 지상에 내려온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개혁가 그룹은 자신들의 이념에 충실했는지 모르나 이 이념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선언’만 있었지 ‘선언’이 물질화되는 구체적인 실천지침은 매우 빈약했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세력은 무능한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대안세력의

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것은 이념이 정책으로 전화되지 못하고 사회운동세력이 정책의 빈곤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처럼 이념의 물질성은 이념 그 자체의 해석과 실천의 태도에 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매개로 실현된다. 더 나아가 이 물질성은 실천의 무기, 즉 이념과 정책에 이것을 지지하고 이를 위해 움직이려는 구체적인 세력을 통해, 다시 말해 세력관계의 변형을 통해 자기를 드러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사회운동은 불행한 상태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회운동과 대중의 관계는 소통의 빈곤상태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실리적 조합원과 이념형 노동조합 지도부’ 또는 ‘진보적인 지적 세력을 받은 이념형 시민운동가와 레드 콤플렉스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노출된 한국적 민주주의의 국민들’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운동이 시민사회에서 물질 토대 뿐만 아니라 대항해게모니 구축에서도 실패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소통의 빈곤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사회운동이 정치의 빈곤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은 시장의 탐욕을 전제로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진 정치를, 연대와 평등을 전제로 한 ‘공적 영역’을 구축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진정한 정치로 대체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계급과 자본주의 국가의 소멸’로 표현되기도 하고 ‘탈상품화의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정의의 실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정치는 보다 깊이 있게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즉 정책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정책을 지지하고 실현해줄 세력을 발견할 때, 비로소 자본주의의 강력한 정치적·물질·이데올로기적 기구로 무장한 지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통의 빈곤으로 특징화되는 사회운동의 정치의 빈곤은 개혁가들의 몸과 영혼을 지치게 하고 서서히 갇아 먹고 있는 듯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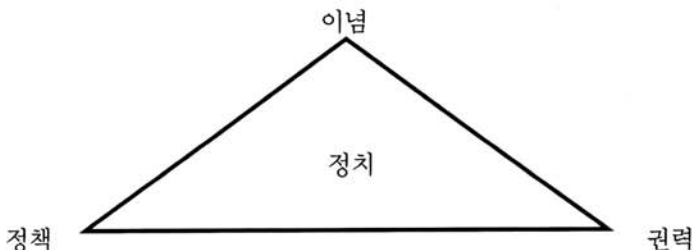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혁가들은 지금도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라는 담론하에 몸에 맞지 않는 일을 시도하고 새로운 공간을 탐색해 보고, 이런저런 학습과 토론도 끊임없이 하면서 마치 유목민처럼 떠돌면서도 자신의 존재적 본성을 잃지 않고 현실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그리고 사회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는 희망적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통의 빈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개혁가들이 느끼고 있는 결핍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시도되지 않는다면, 개혁가들의 헌신성에도 불구하고 저 희망은 지속되기 힘들 것이다.

## II. 정치의 삼각형, 정책평론, 자각된 시민

### 1. 정치의 삼각형과 정책의 의미

정치는 특정 권력이 자신의 생각(이념, 정책, 이데올로기)을 정책을 통해 관철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정치적 삼각형’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치의 삼각형



이념이 세상에 대한 체계화된 일관된 생각이라면, 권력은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속살은 이념과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스턴에 의하면 “어떤 사회적 행동이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은 그 행동이 한 사회를 위하여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활동과 관련을 갖는데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구성원들의 동의하에 합리적·합법적으로 나누는 행위’이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정책이란, “사회를 위한 것이든 보다 좁은 범위의 결사를 위한 것이든, 또는 어떤 다른 집단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 내용은 가치를 배분하는 결정과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정책이든지 특정 권력의 의도나 이익만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다양한 권력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은 상이한 이념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세력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은 사회세력들의 가치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를 담보하고 있는 흔적이다. 이런 점에서 권력에 대한 도구론적·합리적·과학적 관점은 제고되어야 한다. 정책에 도구론적인 정의는 보통 “정책이란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공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이 관점은 정책이 정치의 불합리성 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합리성과 과학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즉 이 관점은 정책을 합리적/가치중립적인 것으로 보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책은 사실 관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사회정책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정책은 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인의 경쟁보다는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기반해서 조직화하려는 실천의 체계화된 노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것은 시민들의 사회권(social right)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들이 진정한 그 사회의 주체가 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사회권은 역사적으로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 조직화를 통해 요구될 때 획득

되어 왔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역사에서 볼 때, 권리는 그것의 결핍을 느끼거나 신장을 요구하는 사람들 스스로에 의해 쟁취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시민들의 자기조직화에서 발전의 계기를 발견해 왔다.

이처럼 자각된 시민들에 의한 정책평론은 사회권을 신장시키는 주요한 계기이다. 사회과학적인 맥락에서 ‘자각’이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실천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 결과 권리의 주체인 자신을 발견하는 행위이다.

정책평론이란 자각된 시민들이 즐기는 중요한 행위이다. 정책이야 말로 시민들의 삶을 규정짓는 일관되고 체계화된 방책이기 때문에 자각된 시민들이 이것을 문제삼는 것(즉 정책평론은 하는 것)은 여유롭고 가치있는 자신들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 정책평론은 그 정책의 의미, 가치 그리고 방향을 끊임없이 문제삼음으로써 정치적·사회적 기획 속에 자신을 위치짓는 자각된 시민들의 중요한 실천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시민들의 실천이자 놀이이다.

결론적으로 정치는 반드시 시민들의 (정책)평론에 기반해야 한다. 평론과 소통에 기반한 정치는 시민들을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상정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의 평론에 기반한 정치에서 시민들은 자기의 일과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자각된 자신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다.

## 2. 평론과 공론장

사회과학은 주위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위치지우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일에 동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주위세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전제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감동’에 있다. 즉 세상에 대한 보다 풍부한 삶의 과정에서 감동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하려는 자신과 그 실천에 대해 감동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궁극



적 존재 이유이다.

평론(비판, 비평)이란 나를 둘러싼 세상을 비판적인 눈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이자 실천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평론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려는 이유를 나를 알기 위해서이다. 내가 누구인가, 어떤 관계맺음 속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질문들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다시 물어져야 한다. 사회적 관계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가치있는 일인가? 바로 이것이 철학이고 정치학,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이다. 결국 사회과학은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평론은 앎을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가 바로 현실에 대한 개입이자 실천이다. 앎은 평론을 통해 가장 잘 도달될 수 있는데, 그것은 대립되는 의견과 충돌함으로써 쟁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나와 다른 타자와 만나고 나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평론은 말로 하는 비판이다. 비판은 각자가 이해한 현실을 말을 통해 드러내는 행위이며,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해한 현실’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내가 이해한 현실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문제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론은 보다 나은 세상에 대한 상과 구체적인 대안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평론은 단순히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 기반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준비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개입하려는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평론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봉착한다. 나를 포함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회적·정치적인 관계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다차원적·갈등적 관계를 혼자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평론은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토론은 더불어 하는 평론이라고 할 수 있다.

토론의 전제는 ‘차이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이가 편하게 드러날 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토론은 때론 흥미롭고, 때론 치열하고, 때론 갈등적일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재미있는 이유는 나와 다른 타자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나의 평론이 보다 성찰적이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는 인간의 복수성이 드러날 때, 즉 개성과 고민, 태도 등이 드러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진다고 주장한다.

토론이 모두 소통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토론은 소통과 깊은 연관이 있다. 소통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전제로 하지만,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통은 기본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동성찰로 나타나고,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은 토론의 동료가 된다.

토론하는 동료들이 거하는, 숨 쉬는 공간이 바로 공론장이다. 공론장은 사회과학(이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평론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성찰하는 곳이고, 사회과학의 태도와 정신을 체화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화(토론)를 매개로 인간의 복수성을 실현하고 즐기는 공간이다.

공론장은 정치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상이한 관점을 매개로 한국의 현실과 나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곳이다. 즉 공론장은 학습하기 위해 토론하고 이론에서 나를 둘러싼 세계와 나를 보는 곳이 아니라, 자신과 타자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고민을 매개로 공동체의 실상과 나를 성찰하는 곳이다. 이처럼 공터에 모인 사람들이 각자 쉽없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론장의 존재조건은 차이가 편안히 승인되고 이것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즉 공론장은 말로써 이루어진 차이의 자각을 통해 각자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며 이 과정은 모두가 공동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공론장은 개개인이 소통을 통해 내가 세계에서 누구인지를 현

실과 나, 타자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런 우리(나와 타자)가 관계론적으로 존재하는 국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게 하고 바람직하고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과학의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근본단위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공론장은 내가 현실에 대한 개입을 말할 매개로 하는 소통을 통해서 나의 존재론이 형성되고 변화하고 그리고 현실에 개입하는 전략의 장이자 인간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다시 말해 실존적·정치적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일상적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정책평론은 시민들의 정치를 일상화하는데 기여한다. 즉 정책평론은 직접적인 이해와 의도를 드러낸 정책을 문제삼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개입한다는 점에서 정치를 일상화한다.

정책평론은 또한 단순히 비판이나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한다. 정책이 구체적인 현실적 방책이라는 점에서 정책평론은 구체적인 대안에 근접해서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안을 제시한다.

정책평론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책을 실현할 권력을 형성한다. 정책평론은 자각된 시민들을 형성하고, 자각된 시민들은 공론장에 모여 정책을 평론하게 됨으로써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스스로 새로운 세력이 된다.

공론장이 문제삼는 평론의 주요 영역은 경제정책보다도 사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정책의 두 범주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으로 구분하는데, 경제정책이 재화의 생산, 유통, 판매 등과 관련된 영역이라면, 사회정책이란, 경제정책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과 관련된, 자본주의의 상품화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매개하는 영역과 관련되

어 있다. 따라서 사회정책은 상품생산과 시장경쟁에 기반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완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한 영역에 위치해 있다.

사회정책의 세부 영역은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노령, 장애, 빈곤, 교육 등의 문제에 걸쳐 있는 영역이며, 더 나아가 환경, 노동, 복지, 장애, 인권, 노동시장 유연화와 양극화 등 시장경제의 영역 밖에 있는 포괄적인 영역이다.

따라서 사회정책에 대한 평론(정책평론)은 사회적 권리, 경제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증진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공민권과 정치권을 포함하는 시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보다 민주적인 방식의 권력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참여적 민주주의이며, 자각된 노동과 시민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영역이다.

한편, 공론장을 형성하는 주요 주체는 ‘자각된 시민’이다. 공론장은 자각된 시민들이 모여드는 곳이며 자각된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그 존재론적 본질이 있다. 다시 말해 자각된 시민들의 공론장은 시민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론장의 주인인 자각된 시민들은 어떤 특권에 굴하지 않고 어떤 전문가·권력자·부자들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론장에 모인 자각된 시민들은 모두 평등한 권리와 자유로운 발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모두 자유로운 영혼이며 상대방과 자신을 우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차이를 편하게 드러내고 즐기는 존재자들이다.

자각된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평론을 통해 우리의 주위세계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각된 시민들은 마중물과 같은 존재이자 마중물 역할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놀이과정에서 상대방도 자각된 시민으로 동화시키는 동시에 동화된 시민들이 또다른 시민들을 자각된 시민들로 바꾸기 때문이다.

### III. 마중물정치와 자각된 시민

#### 1. 마중물 정치: 공론장과 소통에 기반한 자각된 시민들의 정치

마중물은 땅속에 있지만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샘물을 퍼올리는데 필요한 한 바가지쯤의 물을 의미한다. 마중물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중물은 한 바가지의 물이다. 비록 약간의 물이지만, 깊은 샘의 물을 퍼올려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기여한다. 둘째, 마중물은 어떤 물이든지 가능하다는 점이 또한 주목되어야 한다. 즉 이 물의 자격조건이 반드시 깨끗한 물일 필요는 없다. 즉 빗물, 눈물, 구정물 등 어느 물이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셋째, 마중물은 도처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물이 있는 곳이면 마중물이 존재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마중물을 만드는 데는 바가지가 필요하고 펌프가 필요하고 펌프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마중물은 마중물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마중물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퍼올려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해야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

[그림 2]에서 보듯이 마중물은 세 가지 다른 개념을 통해 이해가능하다. 샘물, 새로운 물, 그리고 마중. 샘물은 땅속에 있는 그래서 마중물의 부름을 기다리는 물이고, 새로운 물은 마중물을 통해 세상에 나온 물이다. 마중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 의식과 행위 일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샘물은 지하에 잠겨있는 물인데, 이것은 빗물, 강물, 냇물 등으로부터 오는데 이

중에는 마중물을 만나 새로운 물이 되었던 물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물은 마중물을 만나 세상에 쓰임받게 되는 샘물로서 마중물에 이끌려서 다양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물로 명명될 수 있다. 마중이라는 행위는 마중물의 존재를 자각하고 마중물을 모으고 그리고 마중물을 펌프에 넣어 샘물을 끌어 올리려는 일련의 의식 및 행위를 의미한다.

[그림 2] 마중물의 구조와 순환구조



[그림 2]에서 보듯이 모든 물은 순환고리속에 존재한다. 샘물과 새로운 물은 상호연관되어 있고 이들 사이에 마중물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세 가지 성격의 물은 상호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마중물의 특성에 주목하는 것은 마중물과 이 물의 특징이 기존의 사회주체에 대한 관점의 비판과 성찰 그리고 대안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우선 마중물의 첫 번째 특징 즉 겨우 한바지의 물이지만 그 물이 끝없이 샘물을 퍼올린다는 점에서 마중물은 자각된 시민, 즉 사회운동 활동가, 유기적 지식인 또는 전문가, 정치가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둘째, 마중물이 어느 물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마중물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선형적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셋째, 도처에 마중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마중

물 역할을 할 사람들이 시민사회도처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 물이 있는 곳을 찾아 모으고 그리고 그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마중물이 되고자 한 사람들의 역할과 의미를 말해준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샘물은 단순한 물만이 아니라 기존에 마중물을 만나 변했던 물이 지하에 스며든 물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샘물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 온 물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미 자각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교육, 학습, 토론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각된 시민’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보자.

마중물정치에서 ‘자각된 시민’이란 누구인가? 자각된 시민이란 스스로를 자각하고, 사회현상에 대해 비판할 줄 알고, 저항할 줄 알며, 자신의 위치에서 일정하게 대안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 대해 비판적·성찰적 생각을 하는 모든 시민을 자각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각된 시민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상정되어 온 다른 사회적·정치적 주체들과 대비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각된 시민은 사회혁명을 꿈꾸고 갈등하는 ‘전위’, 시민운동에 존재 해온 비판적·진보적 전문가(또는 명망가), 또는 정치를 직업으로하는 정치가와 다르다. 예를 들어 기존의 시민운동은 교수, 전문적인 활동가 등에 의존해서 이슈 파이팅을 통한 사회민주화에 기여해 왔다. 마중물의 비유로 보면 이것도 우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매우 깨끗한 물이고, 그 수단은 민주주의나 사회경제정의 등의 거시적이고 국가적인 수준의 아젠다와 연관이 있었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착종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전위, 전문가 또는 정치가를 사회변화의 기초로 삼으려는 기존의 관점은 그동안 시민을 변혁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중물론은 누구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 주체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이 전략이 기존의 방식과 다른 점은, 마중을 하는

행위자를 전위의식을 체현한 대자적 계급으로 보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명망가로 보거나 또는 실질적인 입법과정을 관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가로 보지 않는데 있다. 왜냐하면, 마중의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시민이고 마중물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일반시민, 노인, 장애인 그 누구라도 마중물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그들에게 마중물이 되는 것을 자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중물 전략이다.

## 2. 마중물의 정치, 정책 그리고 세력

여기에서는 마중물 정치를 개념화하고 이 정치의 본성이 생활정치, 대안정치, 지역정치, 풀뿌리 정치 등과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중물정치란 [그림2]에서 ‘마중’을 하는 행위(‘마중물 정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물을 모아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바가지에 물을 모으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 정치는 다음의 네 가지 일련의 의식과 행위로 구성된다. 마중물이라는 존재의 자각, 마중물을 만들자는 제안, 마중물이 될 물을 모으는 행위, 그리고 직접행동으로서의 펌프질.

이처럼 마중물 정치란 샘물(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시민, 아직 자신을 마중물로 자각하지 않은 시민)을 사회에 필요한 방식으로 끌고 오는 것이 마중물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행위(즉 교육, 학습, 토론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사회변화의 실천)를 의미한다. 즉 마중물 정치는 사회운동 또는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시민들을 마중물, 즉 자각된 시민으로 만들려는 그래서 경제적·정치적 권력관계를 바꾸려는 의식적·실천적 노력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사회운동이 시민들이 정치적·사회적 의식을 갖고 사회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토론하고 공동성찰하며 이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회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실천을 매개하는 행위



가 마중물 정치인 것이다.

마중물 정치는 접속, 매개, 또는 소통의 전략을 존재론적·전략적 근거로 삼는다. 즉 이 정치는 존재하는 활동가들, 시민들, 노동자들을 매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매개, 다시 말해 연결, 네트워크, 중재 등의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과 차별적이다.

마중물 정치의 매개는 첫째, “차이나는 것을 대비”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중물 정치의 매개는 필연적으로 상호 차이를 드러내고 “비판”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상호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마중물 정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정치적·이념적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를 만드려는 것이다. 스스로의 성찰은 이처럼 각각의 주체들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성찰한다는 점에서 공동성찰로 나타난다. 결국 차이가 편안하게 드러나고 이것을 즐기도록 하는 매개가 마중물 정치의 전략인 것이다.

이처럼 마중물 정치의 필수 요소는, 공론장인 것이며 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공론장은 치열한 이념적·정치적 투쟁의 장인 아레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도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동업자를 모으는 거래의 장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이 공론장은 각자를 전시하거나, 과시하거나 또는 홍보하는 장이어서도 안된다. 다시 말해, 마중물 정치의 공론장은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과 의지 그리고 차이를 편안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보다 성찰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되도록 비판, 지식, 그리고 정책을 통해 매개하는 공간인 것이다.

공론장에 참여하여 마중물 정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행위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현장활동을 해 온 활동가들이지만, 마중물의 의미를 자각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 참여해야 하겠다고 모여든 시민들이다. 이처럼 마중물 전략의 핵심적인 주체는 도처에 존재하는 자각된 시민이 될 소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들은

자기가 서 있는 공간과 시간에 밀착된 존재자라는 사실이다. 이들 인간형은 이념형인간이나 전문가형 인간형이라기 보다는 현실의 자기 토대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구체적인 욕구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편, 활동가들과 자각된 시민들은 자기를 자각하고 이 자각에 기반하여 행동하기 위한 실천의 무기를 찾는 사람들이다.

마중물 정치의 기본요소인 공론장과 자각된 시민은 마중물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암시하게 해준다. 궁극적으로 마중물 정치는 “대안의 모색”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참여자들의 성찰은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자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 정책은 구체적인 생활세계의 시민들의 필요에 대한 반응이고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 할 점은 마중물 정치에 참여한 주체들이 생활세계 속에서 불편과 욕구를 느낀 시민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마중물 정치는 구체적인 생활세계 속에서 터져 나오는 구체적인 비판에 귀기울이고 이에 대한 대안 즉 정책에 민감하다. 그러므로 마중물과 연관된 대안은 거시 담론과 거대정책에 기반하기보다는 생활정책, 미시정책에 친밀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마중물 정치는 존재론적 본성상 생활정치이고 지역정치이며 풀뿌리정치이고 그리고 대안정치일 수밖에 없다. 즉 자각된 시민들의 욕구에 근거하고 이들의 직접행동에 기대는 마중물 정치는 지역에서 보다 잘 피어날 수 있고 직접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와 다르다는 점에서 대안정치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마중물 정치는 어떤 특정 집단의 절대적인 진리를 전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지향을 선험적으로 갖고 있지도 않다. 즉 어떤 정답을 내고 이 해답을 이해하거나 이 답에 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토론과 접속은 어떤 단일한 정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

로가 성찰을 위한 것이고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 정치는 어떤 선형적인 정해진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선지자의 정치’도 아니고, 새로운 진리를 통해 대중을 동원하는 ‘발명가의 정치’도 아니다. 마중물의 정치는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주체들 스스로가 공동성찰을 매개로 하여 자신들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을 즐기는 일체의 태도와 행위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 정치는 비판과 토론, 또는 공동성찰 등의 일반적인 가치만을 강력한 자기존재의 근거로 삼는다. 다시말해 공론장을 통해 토론과 성찰을 매개하는 행위가 마중물 정치의 존재론적 본성이다.

한편, 마중물 정치의 태도와 전략은 어떤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세력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세력들이 토론하여 서로 접점을 만들 수 있도록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중물 정치는 토론을 위한 공간과 이 공간을 풍부히 하기 위한 참조자료로서의 지식 외에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정치 세력을 재편하거나 편가르는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도 하지 않는다. 마중물 정치는 그저 지적 갈등과 이념적·정치적·실천적 결핍을 느끼고 이것을 보다 풍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중물 정치는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일종의 샘을 모두가 파는 것이고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변화의 방향과 속성과 관련하여 마중물 정치는 첫째, 열린정치이며 둘째, 진지전을 기반으로 하는 대항해게모니 전략이라는 점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우선 열린 정치는 이념적 지향과 관련되어 있다. 당연하게도 공론장에 나오고 이 공론장을 경유해서 자신의 제안을 제출하는 자각된 시민들과 활동가들은 다양한 정치적·이념적 지평을 갖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찰을 통해 단일한 답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들이 지향을 어떤 획일적인 무엇으로 정리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의 정치는 이념적으로 열린 정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치는 경향적으로 소크라테스의 등애와 같이 현실의 정치를 비판하

고 이것을 개선, 변화, 또는 변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진보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마중물정치의 전략은 그람시가 말한 대항 헤게모니 전략이자 진지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의 핵심을 공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사회와 정치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물적 토대를 갖는 지배적인 헤게모니에 대해 공론장과 공동성찰을 통해 마중물을 만들고 이 마중물이 시민사회에 점차적으로 뿌려짐으로써 대항헤게모니를 관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마중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진지전에 친화적이다.

#### IV. 지역사회와 공론장의 조직화 전략

##### 1. 마중물 정치와 전략: 사회정책평론을 하는 시민과 대안정책의 형성

이처럼 마중물론은 누구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시민을 대상이라기보다 주체로 바라본다. 즉 마중물 정치의 주체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 다시 말해, 일반시민, 노인, 장애인 등 어느 누구나 가능하다.

이처럼 마중물 정치는 시민들의 정치이다. 즉 시민들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정치인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스스로가 자각된, 그리고 적극적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사회정책 평론을 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책평론이란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과 관련된 이익에 대해 토론하고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국민연금부터 노령연금, 그리고 경로당의 운영 등 각종의 관련제도들에 대해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마중물 정치는 시민들의 욕구에 기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즉 마중물 정치는 존재론적 본성상 생활정치이고 지역정

치이며 풀뿌리정치이다. 다시말해 자각된 시민들의 욕구에 근거하고 이들의 직접행동에 기대는 마중물 정치는 지역에서 보다 잘 피어날 수 있고 직접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마중물 정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또한 마중물 정치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민의 정치이고 이런 점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 정치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이것은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와도 다를 것이다.

정리하면, 마중물 정치는 새로운 세력의 형성과 이들을 위한 정책 대안제시에 있다. 새로운 세력이라고 함은, 기존의 보수적 또는 반공주의나 지역주의에 기반한 세력들이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 욕구를 표출하고 이것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란, 냉전반공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나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기반한 위로부터의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세계로부터 오는 욕구에 기반한 구체적인 사회정책의 제시라는 점에서 그렇다.

## 2. 공론장 조직화의 원칙

공론장은 조직, 돈, 특정 계급이나 개인의 이익을 조직하는 권력적 실체가 아니라 평론과 소통의 정신을 이해한 개인들이 공론장이라는 열린 광장에 나와 자신을 드러내고 타자와 더불어 성찰할 때 존재하는 것이다.

보통 특정 목적을 갖는 다양한 조직들은 돈, 이해관계에 종속된 사람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들에 기반해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즉 정치공학, 자본의 공학 또는 권력공학이 조직론의 핵심이 되었다. 따라서 조직의 핵심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명망가이거나 실력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조직들 간의 전술적·정파적 연합의 형태를 통해 유지·발전되었다.

공론장은 이상의 공학으로서의 조직화를 거부한다. 다시말해, 공론장의 의

미와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감동하고 그리고 동의하는 개별적인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 떠들기 시작할 때 형성된다. 이것은 돈을 가진 자나, 조직을 가진 자가 조직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론장을 필요로 하고 이를 통해 공동성찰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주도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공론장을 원하는 강렬한 자각·마음·욕구·필요가 조직화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론장의 주요 행위자는 일상의 시민들이며 누구도 어떤 특권을 갖지 않는다. 공론장은 공론장의 의미와 역할에 동의한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공간에서 명망가라고 해서, 활동가라고 해서, 지식인이라고 해서 즉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특권을 갖을 수는 없다. 소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소통을 통해 우리의 주위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고자 하는 사람 누구라도 와서 욕구, 필요,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주민, 또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또는 시민이라고 함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참여자의 어떤 이념적 태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의 정체성에 기반해서 학습하고, 토론하고, 배우려는 사람들 일반을 의미한다.

공론장형 인간형(시민)은 궁극적으로 ‘정책을 평론’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장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갈등을 가진 시민들이 말로 하는 소통의 장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사회와 정치의 현상에 대한 평론이며, 그것은 정책평론으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론장에 온 또는 공론장을 경유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정책평론을 할 줄 알고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론장은 정책평론을 하려는 시민들에 의해 구성됨과 동시에 시민들을 정책평론을 할 줄 알도록 그리고 이것을 즐기도록 매개하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공론장은 결국 정책평론을 자기본성으로 하는 시민들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론장은 어떤 단계론적·공학적 사고 속에서 탄생하기보다는 자유로운 정책평론을 하는 영혼들에 의해 구성된다. 흔히 공론장이 하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을 위한 단계론적 계획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 아렌트가 말하는 공론장은 제도화되거나 물질화되는 것으로 실질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좋은 평론을 할 때 존재하고 사라지는 그런 공론장이다.

## V. 마중물 정치의 의의와 전망

마중물 정치는 자각된 시민들에 주목함으로써 미시권력에 대항하는 풀뿌리 정치, 중앙이 아니라 지역에 기반하는 지역정치, 국가나 사회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기반을 두는 생활정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권력에 대한 도처의 저항의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에 기반한 것으로서 마중물 정치의 핵심적인 생각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마중물 정치에 기반한 마중물 정치는 교육, 학습, 토론을 통해 대안정치세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치세계와 생활세계에 물질화될 수 있도록 지식과 정책을 형성하는 토대를 만드려는 시도이다.

결론적으로 마중물 정치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마중물 정치는 공동성찰을 통해 소통의 빈곤, 즉 이념집단간, 정책과 정치세력 간, 그리고 정책과 시민 간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다. 둘째, 보다 궁극적으로 이제 사회운동이 대응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운동이 시민사회에 토대를 둔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는데 기여한다. 셋째, 마중물 정치는 그동안 한국의 정치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 즉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입과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치중해 왔다. 절차적 민주주

의는 시민들을 탈정치화시키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정치의 대상으로 취급해 왔다. 하지만, 마중물 정치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풀뿌리 수준에서 독려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상을 실현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정치적 수준뿐만 아니라 경제적 수준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생활세계적 요구를 정책으로 만들어 관철시키려는 마중물 정치는 이러한 가치분배의 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중물 정치는 천상에 존재하거나 행정부나 의회 속에서만 존재해 온 저들의 정치를 생활세계와 우리 주변, 지역으로 끌어내려 시민들의 놀이로 삼으려는 태도이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마중물 정치는 정확하게 이런 정신 속에 위치해 있고 이것을 최일선에서 실천하려는 것이다.